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-49호

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01. 7. 6

해양수산부장관

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

1. 매립계획의 기본방향

- 가. 연안통합관리계획 등 각종 국가계획에 적합하되,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
- 나. 해양환경·생태계와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계획없는 개발을 제한하며,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해면에 대한 매립은 최대한 억제
- 다. 매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훼손되어 복구가 어렵거나 환경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의 매립 및 공공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매립 허용
- 라. 매립공법도 곡선형의 지선형성·자연석을 이용한 호안조성·친수공간 확보 등 최대한 환경친화적 공법 도입

2. 매립계획의 기간 : 2001. 7. 6 - 2011

- 가.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된 전체지구를 사업시행시기에 따라 1단계(2001~2005), 2단계(2006~2011)로 구분
- 나. 제2차 매립기본계획 고시일로부터 제1차 매립기본계획상 매립면허(승인) 처분이 안된 지구의 매립기본계획은 실효됨. 다만, '99. 8 공유수면매립법 전문 개정이후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·의결을 거쳐 수립한 지구중 매립면허(승인)가 되지 않은 지구 및 제2차 매립기본계획 고시일 현재 매립면허(승인)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지구는 면허(승인)처분이 있을 때까지 제1차 매립기본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봄
- 다. 항만법, 어항법, 신항만건설촉진법,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,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립·승인·지정된 각종 계획 등의 경우에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·고시에도 불구하고 위 5개법률에 의한 각종계획 등의 기간까지 당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봄

3. 매립계획의 내용

- 가. 대상지구 : 총 186개지구 38.23047km², 매립계획의 지구별 내역 및 위치도면 : 별첨1(위치도면은 게재생략)
- 나.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목적은 17개로 구분하고 있으나, 제2차 매립기본계획상 매립용도는 매립수요를 감안하여 9개(항만시설용지, 어항시설용지, 유통가공시설용지, 도시용지, 공업용지, 농축산용지, 문화관광시설용지, 폐기물처리시설용지, 기타시설용지)로 분류하고 세부용도는 지구별 내역에 명기
- 다. 매립기본계획 반영지역의 경우에도 공통 및 필요한 지구별 반영조건 부과(매립계획의 반영조건 : 별첨 2)

<별첨 2>

2. 매립계획의 반영조건

가. 공통사항

- 시설물 안전, 월파·월류방지, 매립지내 배수원활, 육상환경 변화(침수, 저습지 훼손), 해안·해양환경변화(퇴적, 세굴), 친수·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직선적 매립법선을 곡선화, 자연형상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·시공하여야 함
-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매립면허(승인)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
-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연약지반 안정대책을 강구하여야 함
- 해상국립공원내의 어항설치 등은 실시설계시 해당 공원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
-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정하여진 지역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한 행위만 가능하므로 용도가 다를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 후 매립하여야 함
- 기타지역은 매립후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
 - 사업계획수립시 대상지역에 대한 문화재 분포상황을 확인하여 문화재보존 및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
 - 문화재지역 및 주변 500m이내에서의 개발계획수립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동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함
 -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고,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사전협의 등을 통한 민원을 사전 해소한 후 시행하여야 함
 - 매립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최소화되고, 매립이 완료된 후에도 연안환경이 건전하게 유지되어 연안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